

■ 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얼마나 요구했나

257조원... 올해보다 8% 늘어

복지·교육·국방 10%안팎 증가... 공무원 임금 2.5% 인상 전망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액은 2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확정예산 237조원에 비해 8%, 20조원 많은 규모다.

특히, 복지·교육·국방 등의 요구액이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내년 공무원들의 임금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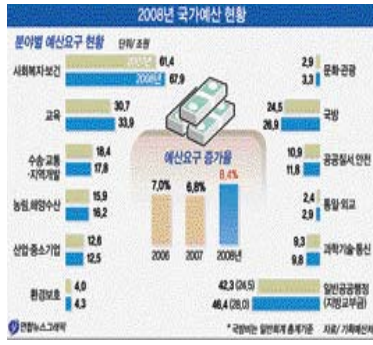
기획예산처는 12일 각 부처들의 2008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을 공개하고 앞으로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된 뒤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은 256조9천억 원으로 올해 확정연 예산 237조1천억 원보다 8.4% 많다. 이 증가율은 2005년의 9.4%에 비해 낮지만 2006년 7.0%, 2007년 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중 예산 지출 요구액은 올해 확정치보다 9.6% 늘어난 180조원, 기금 요구액은 5.6% 증가한 76조9천억 원이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영기획관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인상되면서 각 부처의 요구액도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요구액이 67조9천억 원으로 올해 확정예



산 61조4천억 원보다 10.7% 증가했다. 교육은 올해의 30조7천억 원보다 10.5% 늘어난 33조9천억 원, 국방은 올해 24조5천억 원에 비해 9.9% 증가한 26조9천억 원이다.

통일외교 지출요구액은 2조9천억 원으로 올해의 2조4천억 원보다 20.1% 늘어났다.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액이 1천억 원 증가하는 등 남북 협력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도 올해 2조9천억 원에서 내년 3조3천억 원으로 12.5%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공공질서·안전은 8.1% 증가한 11조8천억 원, 과학기술통신은 6.1% 늘어난 9조8천억 원이다.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 요구액은 17조8천억 원으로 올해의 18조4천억 원보다 3.6%가 줄어들었고 산업·중소기업분야도 0.1% 감소한 12조5천억 원, 농림해양수산은 1.6% 증가한 16조2천억 원에 각각 머물렀다.

연말뉴스

“대통령은 헌소 자격 없어”

선관위 ‘노대통령 헌소 기각’ 의견...靑 질의서 공개 “선거법 위반 해당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하고 설령 헌소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6일자로 현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며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는 헌소 자격이 없다는 게 현재의 판례”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한 데 대해서도 “권력 남用に 기초

한 권한 행사이지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당시 요청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공문서 형태로 전달됐으며 자연인을 상대로 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노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가 질의서를 공개한 것은 언론의 취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라며 “적극적·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질의서를 공개했지,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든가 청와대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

며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애초 선관위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이 보도됐다”며 “선관위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판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선관위의 판단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의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 전체회의도 아니고 자체 검토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실부본 판단이고, 3번의 옐로카드를 받고도 선거법 위반을 받 먹듯이 하는 대통령에게 선관위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최태민 보고서’ 수사하라” 한나라당 공직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 안상수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태민 보고서 등에 관한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말뉴스

검찰, 김재정씨 부동산 매입자금 추적

(이명박 후보 처남)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2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또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전 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이 유출돼 김재정씨 의원 측에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김종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후) 시간

이 상당히 흘러 자금추적이 어렵다.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가 공공기관의 이 전 시장 측 개인정보 조회 등 ‘자료 유출’의혹뿐 아니라 이 전 시장 측 부동산 차명 보유 설을 비롯한 의혹의 본체를 들여다보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고소인의 김재정씨가 출처하지 않아 부동산 차명소유 의

혹 수사에 진척이 없었지만,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도 (차명보유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3일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전 시장 측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신용정보업체 이모씨와 이 회사에 초본 발급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을 조만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말뉴스

‘참의 입’ 전여욱 의원 ‘李 지지’로 선회

한때 박근혜 수호전사를 자처했던 전여욱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전격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저를 제물로 바칠 각오를 했다”면서 “이 전 시장을 돕는 길만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 확신하고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얼렁나고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을 구할 이가 누구인가를 내내 고민했고 결론은 이 전 시장이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받들고 섬길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 일을 당차게 해낼 경험 많은 일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은 배고픔에 소리지어

울어본 사람이며 없는 설움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사람이다. 이 시대 살아남기 위해 직장에서 몸부림쳤던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이 전 시장을 격찬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박 전 대표 체제하에서 당 대변인을 맡아 이른바 ‘박(하)의 입’으로 불렸던 전 의원은 이 전 시장 캠프에서 부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덕룡(DR) 의원의 조만간 이 전 시장 지지선언을 할 것으로 이 전 시장 캠프에서 주장하고 있어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당 중진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이른바 ‘DR 계보’로 불리는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道체육회 체육인에 못말리나



최재호

체육부 차장

이사회 의의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도 관계자는 내년 전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행정역량 강화와 체육회 조직 쇠신을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그렇지만 체육인들은 전남도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임부회장직을 없애고 무보수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사무처장으로 체육인이 아닌, 정년을 앞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구태의 재연이라는 것이다. 체육인을 배제하고 비전문가에게 체육회 사무를 맡겼다가는 체육계의 문제만 더 커질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체육인들은 사무처장 후보로 체육계 인사 3명을 추천했지만 임명권자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공무원을 내정했다며 “체육회를 인사적체 해소창구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푸념도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체육회 간부 살해사건에 대해 박 지사가 사무처장을 잘못 임명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체전은 체육회가 주관할 정도의 작은 행사 아니다. 올해 체전을 치르는 광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행사전체를 도맡아 처리할 ‘전국체전 추진기획단’을 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본연의 임무인 체육행사 자체에만 전념하면 된다. 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전남도는 또 전남체육회를 쇠신하기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 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 수습과 쇠신을 위해서는 체육계 내부를 잘 아는 체육인이 나서야 행정공무원이 나서서 처리할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체육회 간부 살해사건후 거의 모든 체육인들이 ‘체육은 체육인들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전남도가 결국 공무원을 내정한 것은 결국 현장 체육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전남도체육회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오는 20일 이사회 심의가 아직 남아있다. 이제라도 박 지사가 체육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침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lion@kwangju.co.kr

RODEM 식수입 면식 전문매장
로뎀갤러리 신제품출시

특별기획상품행사
인기상품 30%~40% 할인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본사만의 장점

1.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담사
2.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담사
3.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담사
4.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담사
5.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담사
6.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담사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